아파트 청약열풍 지방까지 확산

11.15대책이후 마산·부산·대구 등 투자자 대거 몰려

광주·전남도 수완 등 계약자 발걸음…미분양 감소세

'11·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이 관망세로 접어든 반면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되레 과열양상을 보이는 등 기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부산과 마산 등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청약 조기 마감 단지가 속출하는 등 분양열기가 달아오르면서 향후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분양시장으로의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남 마산시 '메트로시티'아파트 분양추첨에 1만5천여명의 수요자가 몰려든 가운데 일명 '떴다방'이 등장하는 등 지방 분양시장에 때아닌 '청약 광풍'이 일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평당 1천만원이 넘는 아파트로 기록되면서 고분양가 논란도 빚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오픈일인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5만여명의 인파가 몰린데 이어 1순위 청약을 받은 21일에는 청약을 위해 늘어선 줄이 3㎞에 달하는 등 치열한 '청약 경쟁'도 벌어졌다.

부산의 경우 수영구 남천동의 '코오롱 하늘채'가 청약접수 첫 날인 지난 21일 34평형, 39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되는 등 평당 1천만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 수성구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도 지난 1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이후 사흘간 3만여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이처럼 '11·15 대책' 이후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광주·전남 등 타 지방으로의 확산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최근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A아파트가 90% 이상의 계약률을 보이면서 분양과열 조짐을 보인데 이어 B아파트와 C아파트 등 남구를 중심으로한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수완지구도 11개 아파트 건설사들이 공동 분양에 나서면서 이들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도 계약자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지난 10월 이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남의 경우 최근 오픈한 순천시 용당동 D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대단위 아파트의 프리미엄과 고급 마감재 등의 강점을 바탕으로 주말 평균 5천~6천명의 인파가 몰리는 등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마산과 대구의 메트로시티나 레이크시티 모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단 이들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대거 가세했다는 점에서 타 지방으로의 확산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 6개 中企 신기술 인증

중기청, 판로개척 지원 나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26일 (주)대원 등 6개 기업 7개 제품을 신기술 제품으로 선정, 성능인증서를 수여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인증서를 받은 중소기업과 신기술은 ▲(주)대원=방조제 배수갑문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주)포에프=LED 교통신호등 ▲(주)삼호콘크리트= 소켓 및 브라켓 보강조립식 PC암거 ▲(주)시온테크닉스= SMC 원통형물탱크 ▲(주)마스타마린조선=동력모터보트 ▲(주)서원=삼중벽 발포충진벽관 등이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이 지역에서는 31개 중소기업이 개발한 67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서광주세무서. 집단 상가 과세정상화 추진

세정아울렛과 '선진 모범납세지역' 결성식

서광주세무서(서장 김주현)는 집단상가의 세정 자율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세정아울렛 번영회(회장 박병채)와 '선진 모범납세지역' 결성식을 가졌다.

서광주세무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불법거래를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 점진적인 과세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 집단상가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무자료 거래 등 불법행위를 자율규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양제철소 혁신페스티벌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허남석)는 최근 백운아트홀에서 임직원·외주파트너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혁신활동을 종합하고 혁신의지를 재다짐하기 위한 '이노베이션(혁신) 페스티벌'을 열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삼성 지펠냉장고 250만대 팔렸다

6가구당 1가구 사용

삼성전자의 양문형냉장고 지펠(Zipel·사진)이 26일 국내시장 누적 판매량 250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2005년말 현재 국내 1천598만 가구를 기준으로 6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지펠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국내 최초의 '토종 양문형 냉장고' 지펠은 지난 97년 5월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 반응이 이어져 이전까지 GE·월풀 등 외국산 일색이던 국내 양문형 냉장고 시장에서 점유 율 1위로 뛰어올랐다.

지펠은 출시 첫해 국내에서만 2만대가 판매된데 이어 2000년 17만대, 2003년 34만대를 거쳐 올해에는 총 45만대가 판매될 전망이다. 연간 판매량이 10년 사이 23배나 증가한 셈이다.

해외에서도 급신장을 기록,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는 국가가 무려 34개국에 이른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지원

장애경제인협 광주·전남지회 28일 출범

장애인들의 자립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기업인을 육성시키기 위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박영근)가 출범,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는 28일 광주 동구 서석동 KT전남본부 대강당에서 장애기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 및 지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광주·전남지회는 향후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운영, 장애인기업 우수상품전시, 해외시장 개척지원, 컨설팅지원, 자금지원, 장애인기업을 위한 공동구매, 판매 및 판로 확대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박영근 지회장은 이날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장애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조명시장 30% LED로 바꾼다

절전형 발광다이오드…산자부 2015년까지 교체 보급

교통 신호등 전부가 전기절약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교체되는 등 전체 조명시장의 30%를 LED로 바꾸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전개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에너지 효율과 환경 친화성이 높은 LED의 전체 조명시장 내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30%로 늘리는 'LED 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ED는 전기신호를 보내면 빛을 발산하는 조명으로, 교통신호등이나 자동차 및 의료용 조명은 물론, 일반 조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 조명에 비해 최고 90%까지 전기 절감이 가능하고 필라멘트나 수은 등을 쓰지 않아 환경 친화도와 안전도가 높지만 지난 2002년부터 교통 신호등에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 일반 시장은 현재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태라는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우선 전국의 교통 신호등을 2010년까지 모두 LED로 교체하고 유도등과 할로겐 대체 LED 조명은 내년부터 시범 보급을 추진하며 백열전구 대체용 및 채널 간판용 LED는 2010년부터, 형광등·가로등 대체용은 2011년부터 보급을 시작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도입일정에 맞춰 인증과 시범보급, 장려금 보조 등 정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금융민원 Q&A

타인명의 대출금

Q:실제 차주인 제3자에게 명의만 빌려 줬다면?

A:은행이 알고 있었다면 상환 의무 없어

Q : 김모씨 등 2명은 사장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갚아줄테니 대출받는데 도와달라"고 해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장에게 줬다.

대출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장은 이후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납입해오다 회사가 부도나자 대출금을 내지못했다. 이에 은행측이 김씨 등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자 이들이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A : 타인명의를 이용한 대출과 관련해 법원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시 차주가 실제 차주인 제3자를 위해 단지 자신의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그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실제 차주(제3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은행은 대출약정시 민원인들의 자필 날인을 받았고 민원인들이 명의대여자라는 의사표시를 한 일도 없어 대출금의 상환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은 당시 사장은 기존대출이 과다해 추가대출이 곤란한 상태였고 차주(민원인)는 재력이 없는데도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사장의 신용만 믿고 대출을 해 주었다. 또 대출취급 즉시 통장을 사장에게 교부해 사장이 대출금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은행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밖에 대출금을 사장이 계속 불입해 왔고 이를 은행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은행은 처음부터 민원인들이 명의차주에 불과하고 실제차주가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출을 해준 것으로 인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따라 민원인들에게는 상환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도록 조정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 국번 없이 1332〉